

〈바른사회-세미나〉 3.23(수) 21시

청년실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이승길 교수
(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)

1. 고용 환경

■ 고령화 및 저출산+4차 산업혁명 + 코로나19 위기

⇒ 경제정책 등 총체적 난국

⇒ 고용 쇼크 ⇒ 역대급 고용위기 (*고용 참사)

(1) 종합적인 **고용정책 리스크** 현상

- (노동)①저출산/고령화, 인구감소 현재화-돌봄서비스 지원 등 선심성 지원,
② 주52시간제-경쟁력 하락과 저성장,
③ 최저임금 급상승-실업 증가,
④ 공기업 정규직화-불공정한 노동시장으로 취준생 증가,
⑤ 고용보험 확대-장기실업 증가, 근로자간 교차 보조 등
- (기업,에너지수급,산업,금융,지역균형 등)

(2) 우울한 **20대 미래(세대) 문제** 대두

- 세계화의 퇴조, 2022년부터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 발생, 국가채무로 성장 동력 상실
-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보험 기제 파괴, 지속적 국민 부담률 상승 ...

■ 고용참사 ⇒ 취약층 타격 ⇒ 청년 사상 최악 취업 빙하기

(3) 청년 분노 후폭풍

- ‘고용구조’/‘일자리의 성격’ 변화
- 불평등 심화=일자리 양극화 심화=공정가치 붕괴, 헬조선의 부활
(*소득(부동산)양극화)
- 기회=평등, 과정=공정, 결과=정의
- 생물학적 재생산 위기(결혼/출산 등)-근로욕 상실

2. 정부 경제정책

■ 국정운영 5개년 계획-경제분야 5대 핵심 정책 (J노믹스)

- ▷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
 - ▷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
 - ▷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
 - ▷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
- ☑ 청년실업/저출산/노인빈곤 해소, 자살자 줄이기(?)

(1) 소득주도 성장론

- 공공일자리 창출→소득 증대→경기 회복→민간 일자리 확대(?)
-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 양극화-소상공인/자영업자
-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
- ▷ (청년) 좋은 일자리(청년 취업난)
- ▷ 신혼 부부 주거, 일·가정의 양립, 돌봄 인프라, 부동산 집값 안정, 사교육비 절감 등에 대한 밝은 미래 청사진 제시(?)

(2) 정부의 고용창출정책 : ‘땀질식 미봉책’, ‘쓰레기 일자리의 일관’

○ 공공 일자리 사업 등

○ 숙박/음식점업, 도소매업 등의 근로자 고용유지

(3) 노동시장정책

○ 급격한 ‘최저임금 인상’

○ 총량 ‘근로시간’ 단축

○ 비정규직의 정규직화(인천국제공항 사태) 등

(4) 통화정책 : 재정 지출

○ 정부재난지원금(선별적/보편적지원)(*4차 지원금 추경 30조원)

(*재정건정성 악화)

3. 청년실업의 원인과 문제점

■ 청년 일과 사랑?!- 일자리 창출

(1) 청년 취업자수 증감(통계청)(2020)

취업자수	360만1000명 [전년14만6천명 감소(3.9%)] * 인구 소폭 증가(1만 6000명)
고용률	▷ 55.7% (2019년 58.2%)
미취업청년	▷ <u>70만명</u>
체감(확장) 실업률	▷ <u>26.8%</u>



(2) 청년실업의 원인 - 복합적 - 고용시장 진입 곤란-사상 최악 취업 빙하기

-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 ⇒ 신규 사원 채용 감소
-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고도화 요인,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투자 위축, 대기업의 구조조정 ⇒ 일자리 감소
-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시행, 노동비용 증가, 고용조정 경직성⇒신규 인력 채용 부담
- 즉시 활용가능한 경력직(수시) 채용선호 경향(실무 능력 검증)
- 고용 창출력 저하와 수요를 초과한 (전문)대졸자/과잉학력 증가⇒인력수급 인력의 양적/질적 불일치 현상
-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중소기업 기피현상, 청년층의 눈높이 조정 실패
- 직업진로 지도 부족, 취업알선 등 취업관련 인프라(직업안정기관, 학교의 역할)의 미흡
- 노동시장 정보(채용동향,산업계 수요등)분석, 교육과정 반영, 제공하는 체계 시스템 부족

❖ 채용과 취업변화-뉴노멀(New Normal, 새로운 표준)

- ▶ ‘일이 있어야’/‘떨어질 기회가 없다’(채용기회가 없음)
- ▶ 500대 기업 64% 채용계획 없음
- ▶ 정기공채(56.4→42.1%)→**수시채용**(24.5→**36.3%**) : 혁신벤처·스타트업-대기업/직무 적합성.
- ▶ (채용 연계형) 인턴제도(47.2%→54.9%)

❖ 청년세대의 특징

○ M세대(밀레니엄/모바일)(80-90년생)+Z세대(90년대 후반-Y2000후)

- ▶ 인구 30-40% 차지
- ▶ (15-29세) 고용율 : 70.2%→65.9%
- ▶ 일자리문제(cf.30-40대:집/양육,50대:먹고사는문제)
- ▶ 청년의 2030 공정 이슈 : 방향성, 시대정신

◎ 공정/투명/실리/솔직함

◎ 공정 잔혹서 : 헬조선, (주택)‘영끌’, ‘영털’, ‘인국공’(인천국제공항) 사태 등

☑ 청년대화 : 난 걱정 안해 공원에 텐트 치고 살면 되지, 대학 구인 게시판이 텅비었다

☑ 졸업식: 인간 화환띠-취업안되면 감귤장사하지

☑ 청년 초임(희망) : 4,230만원(연봉)

◎ 월급엔 답 없어, 자본주의/핀테크에 익숙-비트코인/그림/빌딩지분까지 손댄다.

◎ 선거:정권 견제론 vs. 지원론(‘변심은 악재’)

◎ 세계화, 디지털기술(DI) 발전-개방 익숙한 세대

◎ 민초단(민트+초콜릿好) vs. 반(反)민초단=느슨한 연대, 끈끈하지 않아도 충분 관계
(cf.혈연·지연·학연)

(3) 청년실업의 문제점

- 코로나로 실업(실직)-인간관계 단절(좌절감)⇒행복감 감소
 - (코로나 블루) ⇒ 자살 증가
- 가구소득 감소로 저소득층 양산, 가정내 갈등 유발
- 사회적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의 감소
- 세대의 생산성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- 국가적 재정 손실

3. 정부정책

(1) 정부의 일자리정책(1)

○ 대통령의 ‘**특단 대책**’ 지시

❖ 부처별 목표인원(할당제) 실시 : **90만개** 중 70만개(노인일자리*=**사실상 단기
세금일자리**) (☞‘4조원’ 책정추진)

❖ 숙박/음식점업, 도소매업 등 근로자 고용유지

★ 노인일자리 : 공원/도서관 등 공공시설 청소와 쓰레기 줍기, 경로당 식사/
청소 도우미,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등

○ 공기업 채용규모 확대 (**‘감소’**)

❖ ‘몰아치기’ 채용(**26,554명**, 2021 상반기)

❖ 공기업+준정부기관(95곳)+기타공공기관(209곳):33.442명(2019)→**27,490명**
(2020,17.8% 감소)

❖ 공기업(36곳,11,283명(2019)→**7,690명**(2020, 31.8% 감소))
(*퇴직자 자회사 재취업 2배)

○ 정부 : **청년인턴** (16,000명→**23,000명**)

(2) 정부 청년고용위기 해소의 맞춤형 대책(2)

○ (일자리사업) 30.5조원 규모(전년 대비 19.7% 증가)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됨(*1/4분기 신속 집행)

❖ 2021년 104.2만명의 고용취약계층 대상 ‘직접일자리 사업’은 1월중 50만명(48%), 1/4분기 중 **83만명**(80%)이상 조기 채용 노력

* (1.31 기준 실적) 58.5만명 채용→2월 76만명 →3월 83.5만명 채용 목표

○ (맞춤형 지원)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장 큰 **청년·여성** 등의 비경할 유입 및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

❖ (**청년**) 구직포기자(Neet) 등의 비경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직 역량 강화¹⁾와 일자리 기회 제공²⁾ 및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³⁾ 마련·추진

- 구직역량 강화 : 국민취업지원제도 **청년 지원**(23만명), 청년**특화 디지털 신기술 훈련**(2만명) 등
- 일자리 기회 제공 : 청년 **디지털일자리**(5만명), 청년 **추가고용장려금**(9만명), 공공기관 **청년고용의무제** 연장(~'23) 등
-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▲특성화 고졸 「고졸취업 활성화 방안」 마련(교육부 협업) ▲인문계 대졸 IT비전공자 특화 훈련과정 운영 ▲구직포기 청년 : 현황 파악·유형분석, 자치단체 연계 발굴·맞춤형 고용서비스 등

- ❖ (여성) 고용센터(실업급여, 훈련) - 새일센터(알선) 연계를 통해 통합고용서비스 제공, 여성 특화 훈련·채용지원 확대(2021.3~) 및 일-돌봄 양립 지원
- ❖ (대학) 산학협력 생태계 마련-미니 클러스트 구축(캠퍼스, 지역, 기업연계)(*교육부-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K+) 육성사업 지원)

4. 청년일자리 개선방안

■ 코로나 위기로 경기침체-조속한 극복-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?

■ 청년 일자리창출 근본 대책-‘공공’/‘**민간**’ 일자리 확대

▶ 구조적 요인으로 단기간 해소 곤란 문제

▶ 거시정책-경제/산업/교육/고용 등 다각적 측면 접근

▶ **경제성장** 통해 민간부문 고용창출력 상승

❖ (범)정부 : 수요자 입장에서 ‘청년고용 활성화 대책’(+재정)

❖ 민간기업 :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-양질 일자리

(1) 경제정책

- 기업-‘기업가 정신’ 부활(근로자 정신)
- 4차산업혁명-준비(대학교육, 직업지도/직업훈련 강화-인재양성)
-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과 보급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
- 개인별 특화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

(2) 노동정책

-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, 노동유연화 강화 (+복지체제 강화)
- 최저임금 인상 문제-최저임금 동결
- 52시간 근로시간 문제-근로시간 유연화
- 중소기업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-일하는 방식 개혁

(3) 청년일자리 정책 (재정정책)

- 산업/기업/소상공인 지원
-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, 창업 활성화, 신성장 동력 육성정책
- 규제완화/개혁-규제 샌드박스 사업(대한상의), ‘기업’부활
- 사회적 기업가 육성,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- ❖ 청년 일자리보장제 : 전국민 일자리보장제-시/군/구 수요분야(일자리은행 운영)생활임금+사회보장-공공분야+(국가돌봄제), 전국민소득보장제, 창업 지원.

(4) 기타 : 청년일자리 창출¹⁾

- 청년 일자리와 ‘기업 상속세’의 빅딜
- 기업들의 사관학교 설립/운영
- 벤처기업의 활성화 (창업 지원)
- 히든/디지털 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신국가 R&D 비용지원
- 중소기업의 업그레이드(세금감면, 직접지원)

1) 김택환, 뉴코리아 비전과 도전, 자미산, 2021, 151-161쪽.